

역사의 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기광서의 북한현대사 연구

김성보(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논문요약

이 논고는 북한현대사 연구에 한 평생을 바친 기광서의 연구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짚어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기광서의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은 옛 소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문서고 혁명’을 북한사 연구로 확장시킨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그는 국가 형성과정에서 북한과 소련지도부를 공동의 행위 주체로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그의 ‘공동의 행위 주체’론은 북한 국가 형성의 복합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북한의 자주성과 국제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북한 국가 형성의 문제 다음으로 기광서가 깊이 관심을 가진 연구주제는 해방8년기의 좌우-남북대립의 역사이다. 그는 해방후 북한에서 벌어진 반소반공운동의 실상을 해명하고, 한국전쟁기 남한 정계 인사들의 월북·납북, 전쟁으로 북한 영토가 된 ‘신해방지구’ 정책 등에 대해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제출했다.

기광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이제는 각각의 정당성과 체제적 안정성을 지닌 국가임을 서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특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남북 모두 동질성을 이루기 위해 함께 변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주제어: 북한현대사, 북한 국가 형성, 공동의 행위 주체론, 남북 상호 존중, 한반도 평화체제

I. 기광서의 학문을 돌아보며

기광서 교수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학계의 큰 손실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기고 있다. 그가 발굴한 귀중한 옛 소련 자료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북한현대사 연구 성과는 앞으로도 학계의 귀감이 되며 두고두고 이용되고 인용되리라 믿는다.

기광서가 남긴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서울: 선인, 2018)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서평이 나왔으며, 부음을 접하고 그가 걸었던 학문의 길을 소개한 글도 동북아워치에 실렸다.¹⁾ 이로써 그의 학문을 짚어볼 나침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가 평생 펼쳐온 학문 세계를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연구 주제에 집중되어있다. (1) 북한 국가 형성의 ‘공동 행위 주체’ 연구, (2) 해방8년기(1945~1953) 좌우-남북대립의 성격 (3)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북한 체제 존립의 토대 이해 등이다. 그 외에도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 등 다양한 논문들이 있다.

이 발표는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3개의 주제별로 그 논지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각 주제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남북한 현실에 어떤 빛을 던져주는지 그 함의를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북한 국가 형성의 ‘공동 행위 주체’ 연구

1990년대 초반 소련 체제의 개방과 혼란 속에서 예전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던 소련의 문서고가 일부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는 ‘문서고 혁명’에 가까운 정도로 냉전사와 소련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1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증적 연구가 쉽지 않았던 북한사 연구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여러

1) 조수룡, "구소련 자료로 재구성한 북한의 국가 형성사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 『역사와 현실』 114호, 2019; 이재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 『군사』 111호, 2019; 김학준, "북한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사학자 기광서(奇光舒) 교수를 보내며", 『동북아워치』 56호, 2025.

연구자들이 (옛)소련 문서고들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련과 북한의 국제관계 및 북한의 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기광서의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은 옛 소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문서고 혁명’을 북한사 연구로 확장시킨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그는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Ф),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ЦАМО РФ) 등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북한 국가 형성과 소련의 역할을 해명했다. 이 자료들에는 북한 주재 소련 민정국, 지방 경무사령부, 소련군 제25군, 연해주군관구 등소련의 북한 관여 기구들 및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정보부, 내각 외무성 등 소련의 대외정책 기구들이 생산한 문서들이 포함되어있다.²⁾

그의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무엇일까? 북한 국가 형성의 주체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소련이라는 외인을 강조하거나 항일무장투쟁 집단 등 한인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내인을 중시하는 어느 한쪽 편향의 시각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그는 국가 형성과정에서 북한과 소련지도부를 공동의 행위 주체로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그의 실증작업은 단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옛소련자료를 그대로 따라가면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은 소련의 외무성과 국방성이 각자의 안을 제시하여 경합하다가 소련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국방성안 중심으로 전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광서는 이 자료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다른 북한 자료와 연구성과들을 참고·대조하면서, 국방성안 자체가 김일성 북한 지도부의 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고 소련과 북한 지도부의 상호 협력 속에 토지개혁이 실시됨을 논증했다. 북한의 헌법 채택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동일한 관점에서 소련과 북한 지도부를 공동의 행위주체로서 그려낸다. 헌법 초안은 소련과 북한 지도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련공산당 정치국이 다른 의견을 권고했지만, 1948년 4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그 권고안은 3가지 조항만 수용했고 나머지 22개 조항은 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었다.

그의 ‘공동의 행위 주체’론은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떤

2) 조수룡, 위의 논문, p. 365.

합의를 지니고 있을까? 20세기 후반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동요, 해체되는 과정에서 국내외에서는 북한 역시 무너지거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북한붕괴론이 고조되었었다. 동유럽국가들처럼 북한 역시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외삽국가이고, 북한이 비록 그 이후 주체를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냉전에 의한 체제간 긴장 덕분에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런 기대감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붕괴론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가 형성과 유지과정에서 오직 주체의 힘으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것인가? 북한은 결코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한 적이 없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길이 자급자족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도 호혜 평등의 경제 교류를 지향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핵문제도 고립된 지금도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한다. 기광서의 ‘공동의 행위 주체’론은 북한이 자주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한 역사상 가장 오랜, 쿠바보다 더 장기 지속되고 있는 경제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제 교류를 통해 살아남고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그는 북한 국가 형성의 복합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북한의 자주성과 국제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III. 해방8년기(1945~1953) 좌우-남북대립의 성격

북한 국가 형성의 문제 다음으로 기광서가 깊이 관심을 가진 연구주제는 해방8년기의 좌우-남북대립의 역사이다. 그는 해방후 북한에서 벌어진 반소반공운동의 실상을 해명하고, 한국전쟁기 남한 정계 인사들의 월북·납북³⁾, 전쟁으로 북한 영토가 된 ‘신해방지구’ 정책⁴⁾ 등에 대해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제출했다.

북한의 국가 형성에 대한 그의 앞선 연구에서는 그 공동 주체인 소련과 북

3) 기광서, "한국전쟁 개시 이후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납북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2019.

4) 기광서,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동화와 억압", 『통일과 평화』 13권 2호, 2021.

한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서술을 찾기 어렵다.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 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 즉 반소반공운동에 참여한 역주체들 및 일반 대중을 역사의 또다른 주역으로 인정한다면 과연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기광서는 이 난제를 놓고 어느 한편에서 이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기보다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여 차분하게 사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의 반소반공운동에 대한 그의 연구를 살펴보자.

해방 후 북한의 국가 건설은 많은 도전 속에 이루어졌다. 신의주학생사건과 반탁운동, 토지개혁 반대운동,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독교도의 반대운동 등 학생과 일반 대중이 참여한 광범한 저항이 있었다. 조선민주당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은 북한에서 ‘우당(友黨)’, 즉 통일전선의 역사로서 기록되어있지만, 그 정당 내부에서도 반소 반공운동이 벌어졌다. 그는 “행위 주체인 공산당과 소련군 지도부 등 주체세력의 활동뿐 아니라 이에 도전한 반소반공운동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북한사의 온전한 구성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⁵⁾ 기존의 반공반소운동 연구는 체험과 회고를 바탕으로 했기에 학술적 객관성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기광서는 이와 관련한 옛소련문서들을 검토 분석하고 기존 문헌들과 대조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소반공운동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해방 후 북한에서 반소반공운동이 벌어지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일제하에 사회주의사상은 불온사상으로 간주되었고 각종 정책을 통해 극우반공이데올로기가 해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직후 북한 각지에 주둔한 소련군 일부가 약탈과 부녀자 강간과 같은 범법행위를 하여 주민들 사이에 반소 감정을 일으키게 된 것이 해방 후 반소반공운동이 펼쳐지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운동은 “해방이라는 시대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한 대의와 명분을 갖추지 못했고, 공산측이 주도한 정치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힘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린다.⁶⁾

북한 정부는 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일부 지역을 ‘신해방지구’라는 이름으로

5) 기광서, “해방 후 북한의 반소반공운동: 조선민주당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동북아연구』 36권 1호, 2021, p. 138.

6) 기광서, “해방 후 북한 반소반공운동의 실상”, 『동북아연구』 34권 2호, 2019, p. 171.

편입하여, 그 지역에서 반공주의적 토대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해방지구' 및 그 반대의 성격을 지니는 '수복지구'는 평화적이며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일방적인 편입 과정이 일어날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 기광서는 북한 당국이 '신해방지구'를 안정화시키고 북한 질서를 이식시키기 위해 식량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계층을 훈련시켜 체제 유지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교양과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지역에서 교육과 교양으로 해소되지 않은 반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 강압과 억제의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월남자 가족에 대한 하부집행 단위에서의 차별과 박해가 만연해있었음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한국전쟁기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과 납북에 대해서도 그는 균형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다. 그는 당시 신문과 옛소련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들의 월북에서 자발적인 동기는 소수에 그쳤을 것이고 대부분은 북한의 점령 통치에 협조한 이유로 남한 권력에 의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거나 북한측의 강제 구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이념적으로 재단하기보다는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로서 그들을 존중하며 이들 또한 역사의 한 주체로서 그려내었다.

기광서의 해방8년기 좌우-남북대립에 대한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집중되어있다. 이 시기는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기이며, 2018년 문재인정부와 김정은정부 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확산되던 시기에 해당한다. 그는 이 흥분된 시기에 오히려 어느 한 쪽, 또는 한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남북간, 좌우간 갈등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되돌아보았다. 한반도 주민을 고통과 갈등 속에 몰아넣었던 분단의 역사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온전히 밝혀내고 그 함의를 찾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를 통해 역사인식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북한 체제 존립의 토대 이해

많은 역사연구자들은 종종 판관의 자세로 역사를 연구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고는 한다. 기광서의 글이나 언행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기는 힘들다. 많은 북한연구자들은 쉽게 통일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 그의 글이나 언행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접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는 현실과 거리를 둔 채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 탐구자였을까? 막상 그렇지 않다. 그와의 만남에서 대화의 소재는 반은 학문이지만 반은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이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그가 쓴 글을 보면 그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분단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대립과 대결로 점철되었다. 체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남북 당국은 모든 면에서 단절된 채 적대적 태도만을 유지하였다. 전체 한반도 주민들의 뇌리에 뿌리깊이 각인된 상호 부정적 인식은 언제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되었다. 남한 내에서 북한은 늘 타도해야 할 ‘적’이었으며, 그러한 사고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존재하거나 허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인식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과거 이승만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남한의 정권을 ‘미제의 식민지 권력으로 규정지었다. 또한 남한을 ‘해방’시킴으로써 분단 극복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견지해 왔으며, 이에 따른 통일문제를 체제 존속의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⁷⁾

그는 남북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대립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역사를 연구하다보면 종종 현실의 시각에서 과거를 그대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과거의 틀로 현재를 그대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한다. 기광서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한다. 과거=분단국가 형성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세계

7) 기광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힘찬 도정-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역사와 현실』 65호, 2007, p. 5.

사의 흐름이 그러했고 그 흐름에 동참한 한반도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세계와 호흡하며 분단국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절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삼으니 문제라는 인식이다.

남북 정부와 사회가 상호 적대감으로 대립해오기만 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제는 남북 당국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가 외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방후~한국전쟁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세우는 문제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난다. “외부적 요인이 압도하는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규정지어온 불변의 특성”이었다.⁸⁾ 그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그는 첫째, 남북간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둘째, 주변 강대국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 스스로 주체적으로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기광서는 남북간 상호 적대의식의 해소를 위해 북한 국가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해명했으며, 남북의 분단정부 수립과 전쟁 속에서 벌어진 좌우대립과 남북대립의 역사를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 모두 이제는 각각의 정당성과 체제적 안정성을 지닌 국가임을 서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문민정부이래 남한 정부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점차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북측은 남측 내부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협상의 주도권 획득은 물론이고 체제의 정당성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⁹⁾ 남한(한국) 사회는 그 반대로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오직 개인숭배와 독재, 인민에 대한 억압으로만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광서는 “북한체제의 유지, 발전에 대한 조건 분석”이라는 글에서 반세기 이상 수령의 절대권력으로 특징짓는 북한체제가 그동안 어떻게 존속,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 (1)정치·이데올로기적 조건, (2)경제적 조건, (3)사회 문화적 조건, (4)대외관계적 조건 등 지금까지 학계의 북한

8) 기광서, 위 글, p. 6.

9) 기광서, “북한체제의 유지, 발전에 대한 조건 분석”, 『통일문제연구』(조선대), 2002, p. 53.

연구성과를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가 정치정치·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 파악한 요소는 권력의 성격, ‘인민적’ 통치와 ‘물리적 통제, 서구식 정치의 경험 부재, 분단체제와 통일과제, 유일사상으로의 무장이라는 다섯 가지이다. 그리고 경제적 조건으로는 자력갱생의 원칙, 사회경제적인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는 유교적 전통과 집단주의 체제를, 그리고 대외관계적 조건으로는 대외교류에의 소극성, 반미국가와 미국의 북한 고립정책 및 남한 사회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적 속성의 대내외 선전 등을 제시했다. 실로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성격에 관련한 다방면의 시각을 집대성한 글이다. 기광서는 이러한 북한의 특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남북 모두 동질성을 이루기 위해 함께 변화해가야 함을 역설한다.

V. 맺음말: 남북간 상호 존중과 한반도 평화의 길

기광서 교수는 북측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측을 부정하거나, 남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측을 부정하는 자세, 다시 말해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타자를 부정하는 역사-현실인식에 맞서 상호 존중의 역사-현실인식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남북간 상호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단점을 찾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이미 두 개의 완성태인 국가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되, 서로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함께 변해가는 길, 그 참으로 지난하지만 피할 수 없는正道(正道)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 길이 기광서의 학문 여정이다. 그 길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그 길을 동료와 후학들이 걸어가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서울: 선인, 2018)

2) 논문

기광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힘찬 도정-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역사와 현실』 65호, 2007

기광서, "한국전쟁 개시 이후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납북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2019

기광서, "해방 후 북한 반소반공운동의 실상", 『동북아연구』 34권 2호, 2019

기광서,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동화와 억압", 『통일과 평화』 13권 2호, 2021.

기광서, "해방 후 북한의 반소반공운동: 조선민주당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동북아연구』 36권 1호, 2021

김학준, "북한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사학자 기광서(奇光舒) 교수를 보내며", 『동북아위치』 56호, 2025.

이재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북한사, 북소관계 : 기광서 저,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선인, 2018)", 『군사』 111호, 2019

조수룡, "구소련 자료로 재구축한 북한의 국가 형성사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역사와 현실』 114호, 2019.

Abstract

Ask for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ruth of History: A Study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North Korea by Gi Kwang-seo

Kim, Seong Bo(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categorizes Ki Kwang-seo's research on modern North Korean history into three main areas and examin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his work.

His book,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tate and the Soviet Union* is a comprehensive scholarly work that makes full use of archival material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 extend the 'archives revolution' to the study of North Korean history. His Theory of "Joint Agency" provided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 captures the complexity of North Korea's state formation, thereby enabl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oth North Korea's autonomy and its international character.

Following the issue of North Korea's state formation, the research topic in which Ki Kwang-seo took a deep interest was the history of left-right and North-South confrontation during the eight years following liberation. He elucidated the reality of the anti-Soviet and anti-communist movements that took place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presented notable research findings on the defection and abduction of South Korean political figures to the North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policy regarding the "New Liberation Zones" that became North Korean territory as a result of the war.

Ki Kwang-seo proposed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now mutually recognize each other as states possessing their own legitimacy and systemic stability. He argued that, since North Korea's current state did not come about overnight, we must observe the situation with patience. He emphasized that, rather than unilaterally

expecting North Korea to change, both North and South Korea must change together to achieve a sense of commonality.

Key Words: Contemporary History of North Korea, 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tate, Theory of Joint Agency, Mutual Resp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투고일: 2026년 06월 25일, 심사일: 2026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3일

